

건강한 삶과 정부



韓 達 鮮
한림의대 의무부총장

사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건강 없이는 원만한 생산적 활동이 불가능하고 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도 없다. 그러므로 건강은 행복한 삶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의 하나임과 동시에 그러한 조건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수단이기도 하다. 건강의 이와 같은 가치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적어도 본질적으로는 별로 변하지 않았겠으나, 건강의 보호·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는 어느 나라에서나 관심이 점점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과학과 의료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오늘날의 보건의료서비스는 효과도가 크게 향상됨으로써 기본적 인간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필수품적 성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면 사망과 이환을 방지할 수도 있고, 불구를 예방할 수도 있으며, 고통과 이환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수품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만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조가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는 효과도의 향상과 더불어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이용량도 증가하여 보건의료체계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 운영하는 일이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는 데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는 생산과 소비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장실패요인 때문에 국가별로 얼마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정부가 보건의료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의 결정요인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외에도 많지만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보건정책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보건정책의 과제로서 적어도 세 가지를 중요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소요 비용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토록 하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이용자만족을 향상시키되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미시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서비스는 과잉공급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의료비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등의 거시경제적 효율을 제고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국가발전정책에서 주요 관심사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이다.

그러나 성장, 발전해온 과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의료부문은 시장실패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효율을 저해하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들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의료인 또는 개인자본이 지배하는 민간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의료공급에서 매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기관이 투자재원과 운영비를 전적으로 의료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이와 같은 재원구조로 인하여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경영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철저한 상업화 경향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종 의료기관들이 의료수익을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보인다. 소비자의 지식과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자간의 치열한 경쟁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게 마련이다. 의료보험은 저보험료에 의한 적

용확대를 서두른 탓에 급여가 미흡하여 전국민 의료보장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의료보험이 의료공급자와 의료이용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발휘하는 의료제도적 기능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도에서 수가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함으로써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정부의 의료정책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현재는 우선 관리운영체계의 통합일원화를 주축으로 하는 의료보험의 구조개혁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바람직스러운 기능은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의한 급여수준의 적정화로 의료이용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이용의 질과 효율은 의료공급체계의 특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게 마련이고, 한편으로는 의료보험이 의료이용과 공급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공급체계와 상호 긴밀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진행중인 의료보험 개혁을 의료공급체계의 구조를 포함한 포괄적 의료개혁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경제난국에 처해 있다. 이 난국을 극복하고 다시 발전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부문이 개혁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지금까지의 간단한 관찰과 주변여건이 변화할 전망에 비추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당면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개혁을 통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접근이 되리라 믿는다. **본지**